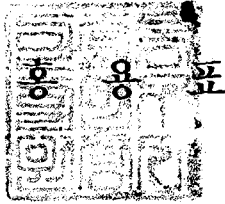


연구총서 2000-34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



통일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서론	1
II. 전략문화의 이론적 고찰	4
1. 안보이론과 전략문화	4
2. 전략문화 연구를 위한 분석틀	9
III.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 요인	11
1. 지정학적 요인	11
2. 역사·경험적 요인	12
3. 분단의 영향	13
4. 전쟁의 경험: 한국전쟁	17
5. 정치문화: 주체사상	21
IV. 북한의 안보전략	25
1. 핵무기 개발 전략	25
2. 미사일 개발 전략	33
V. 결론	42

I. 서론

1980대 말부터 시작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직성, 동구 사회주의 시장의 소멸,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동구 사회주의 체제 및 소련이 붕괴하고 남한이 러시아, 중국 등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아울러 북한이 50년간 적대국으로 간주해 왔던 미국 주도하의 신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북한은 고도의 안보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 및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적 협력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핵무기 및 미사일 등을 앞세운 '협박외교' 전략을 구사하였다. 탈냉전기 안보위기 증대와 함께 북한은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한 국제사회가 핵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오히려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동결'을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협상카드로서의 핵무기의 효력이 약화되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또 다른 협상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8년 8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동북아 및 세계 국가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1999년 다시 시험발사를 준비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

2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

의 타협을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이를 몇 차례 재확인하였으나, 아직도 미사일의 개발, 생산, 배치 및 수출이 북한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이 ‘협박외교’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외교적 실리를 취하였으나, 도발적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은 ‘불량국가’ 및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완전히 해제시킬 수 없었으며 남한 및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북한은 ‘비합리적(irrational)’이며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 등 서구에서 이러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국제정치 연구의 주류를 형성해온 신현실주의적 시각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비합리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경우 북한의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의 전략적 행동 및 안보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전략문화 이론은 각 국가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전략적 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안보정책은 각 국가 및 지도자들의 철학, 정치, 문화, 인지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전략이론에서는 동일한 안보환경에 처한 엘리트는 동일한 안보전략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지만, 전략문화 이론은 서로 다른 문화적 영향하에서 사회화가 된 엘리트들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문화적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문화·역사적

특수성(예를 들어 한국전쟁을 통해 경험한 미국에 대한 두려움 및 적대감, 주체사상 등)을 고려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예측불가능'해 보이는 북한의 행동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예측가능한 행동양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전략문화의 이론적 고찰

1. 안보이론과 전략문화

안보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등장과 핵무기의 개발이라는 외교정책과 군사기술에 있어서의 획기적 변화에 자극 받아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¹⁾ 따라서 국가안보란 일반적으로 대외적·군사적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안보개념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한다. 첫째, 정치적 독립 및 영토의 통합성이 국가의 핵심적 가치이다. 둘째, 이러한 가치에 대한 위협은 즉각적으로 안보문제를 초래한다. 셋째, 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주로 국경 밖에서부터 가해진다. 넷째, 대부분의 위협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것이며 따라서 군사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안보개념은 냉전시대를 풍미한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의 안보연구에서는 1950년 허츠(John Herz)가 ‘안보딜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래 핵무기의 사용 혹은 위협과 관련한 전략 이론들이 안보연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였다. 특히 게임이론 및 행태주의 방법론의 영향으로 국가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 혹은 정책결정은 주로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1) Joseph S. Nye and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12, No. 4 (Spring 1988). 안보학은 1950년대 중반 ‘대량보복’과 같은 핵전략의 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안보학이 국제관계, 외교정책과 같이 보다 넓은 학문적 틀 안에서만 다루어졌다. 안보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 (1991) 참조.

그러나 탈냉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안보연구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²⁾ 냉전시대에 핵무기와 미·소 양극체제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국제질서가 와해되면서 과거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한 위협세력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특히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면서 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안보연구가 냉전의 종식을 예측하기는커녕 기대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현실주의 패러다임 중심의 안보개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³⁾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안보개념을 재정립하고 그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분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안보정책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국내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개념을 도입한 ‘안보문화(security culture)’ 혹은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연구에 문화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 쉬나이더(Jack Snyder)가 ‘전략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쉬나이

2) 물론 냉전시대에도 안보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우선 냉전이 심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초기의 안보연구들은 비군사적 안보문제, 안보와 국내정치와의 관계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위기, 경제적 상호의존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차원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원, 환경, 인구 문제 등도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안보개념의 재정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종식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avid A. Baldwin,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48, no. 1 (October 1995) 참조.

3) 최근의 안보 영역 확장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작으로 손꼽히는 부잔(Buzan)의 저서 *People, State and Fear*은 1983에 처음 간행되었다. 그러나 부잔 자신도 1991년 개정판에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탈냉전이 가져온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는 소련의 핵전략을 “일반적·합리적 인간”의 행동 기준에 의해 분석하기 보다는 소련 정책결정자 본인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소련에는 핵전략에 대한 신념, 태도 및 행동양식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소련 특유의 전략문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⁴⁾ 이후 부스(Ken Booth), 그레이(Colin Gray)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전략문화 연구가 발전되어 왔다.⁵⁾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안보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안보연구에 대한 기존의 현실주의적 시각, 특히 ‘합리성’을 중심으로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는 신현실주의적 이론들이 냉전 종식을 예측하기는커녕 그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냉전종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적 접근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안보문화이론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카젠슈타인(Peter J. Katzenstein)은 기존의 국가안보이론들 대부분이 당연시하고 있는 국가이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부터 자신의 논의를 출발하였다. 카젠슈타인은 냉전 종식과 관련 ‘동유럽으로부터의 철수를 완강히 거부해 왔던 소련이 왜 냉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유럽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자신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풀어 가는 과정을 통해 국가이익은 합리적 행위자에 의해서 ‘발견’되

4) Jack L.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Report R-2154-AF, September 1977), p. v & p. 6.

5) 예를 들어 Ken Booth, *Strategy and Ethnocentrism* (New York: Holmes & Meier, 1979); Colin Gray, *Nuclear Strategy and National Style* (Lanham, Md.: Hamilton Press, 1986) 등 참조. 전략문화 연구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Alan Macmillan, Ken Booth & Russel Trood, "Strategic Culture," in Ken Booth and Russel Trood, eds., *Strategic Cultu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London: Macmillan, 1999), pp. 4~8 참조.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국가이익은 사회의 문화적 요인에 반응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이다.⁶⁾

전략문화 이론은 각 국가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전략적 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안보정책은 각국가 및 지도자들의 철학, 정치, 문화, 인지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 따라서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전략이론에서는 동일한 안보환경에 처한 엘리트는 동일한 안보전략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지만, 전략문화 이론은 서로 다른 문화적 영향하에서 사회화가 된 엘리트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⁸⁾

문화적 접근법은 안보연구에 대한 합리적 선택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이의 유용성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전략문화 이론은 기존의 접근방법에 문화적 접근을 접목함으로써 한 국가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을 하

- 6) Peter J. Katzenstein, "Introduction: Alternative Perspectives o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pp. 1~32.
- 7) 보다 넓은 의미에서 마자르(Michael J. Mazarr)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서로 연계되어 있는 4가지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① 삶의 장치로서의 문화: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성공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문화는 국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인식의 여과장치로서의 문화: 문화적 관념과 신념체계는 국가의 지도자가 정책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결정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③ 사회·경제적 영향으로서의 문화: 문화는 사회·경제·군사적 구조와 기구에 대한 주요 청사진의 역할을 수행하며, 따라서 한 국가의 행동과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④ 문명의 충돌: 문화는 국제관계에 대한 지배적 분석틀을 제공하며, 국가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 바탕의 역할을 하고, 국제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Michael J. Mazarr,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Review Essay," *Washington Quarterly*, Vol.19 No.2. (1996), pp. 178~182.
- 8) Alastair Iain Johnston,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4 (Spring 1995), pp. 34~35.

거나 혹은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안보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점은 안보문화이론은 ‘왜 어떤 국가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주어진 국제체제상의 관행 혹은 규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가’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⁹⁾

신현실주의자인 왈츠(Kenneth Waltz)는 한 국가는 국제체제에 의해 주어진 어떤 행동양식에 따르라고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국제체제에 순응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 국가 자신도 점진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국내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은 비슷하게 행동한다”라고 주장한다.¹⁰⁾

이러한 논리를 따를 경우, 북한의 행동, 특히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한 행위들은 국제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해석 이외의 설명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문화적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문화·역사적 특수성(예를 들어 한국전쟁을 통해 경험한 미국에 대한 두려움 및 적대감 등)을 고려할 경우,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북한의 행동패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9) Michael C. Desch, "Culture Clash: Assessing the Importance of Ideas in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Summer 1998), pp. 166~68.

10) Kenneth Waltz,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Vol. 6, No. 1 (Autumn 1996), p. 54.

2. 전략문화 연구를 위한 분석틀

가. 개념 및 가정

본 논문은 북한의 안보정책을 문화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기 위하여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를 주요 분석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전략문화는 무력 행사 혹은 무력위협 행위와 관련한 한 국가의 전통, 가치, 태도, 행동양식, 관습, 상징, 그리고 환경적응 및 문제해결에 대한 독특한 방식 등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전략문화는 지정학적 위치, 역사, 정치문화 등을 통해 형성된다.¹¹⁾ 그런데 여기서 전략이라는 개념이 군사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Colin Gray)는 안보연구에 있어서 '전략(strategy)'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무력(force) 혹은 무력 위협(threat of force)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전략은 군사력과 정치적 목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며 따라서 전략은 군사적 측면 이외의 다른 정책적 수단들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¹²⁾

전략문화 분석의 기본가정은 한 국가의 안보정책적 산출(output)은 그 국가의 전략문화적 투입(input)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국가의 전략문화가 그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략문화의 영향력의 정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국제적 환경, 기술발전 등의 요인들보다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11) Ken Booth,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ffirmed," in Carl G. Jacobsen, ed., *Strategic Power: USA/USSR* (London: macmillan, 1990), p. 121.

12)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7.

수도 있다.¹³⁾

나. 분석틀

전략문화적 접근을 통해 안보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¹⁴⁾ 첫째, 분석 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역사, 정치문화 등을 통해 그 국가 특유의 전략문화 유형을 파악한다. 지정학적 위치는 한 국가의 안보인식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는 자연적 국경의 안전성을 결정하며, 주변국과의 적대 및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정학적 위치는 한 국가가 공격적 전략을 선택하는나 혹은 방어적 전략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역사, 특히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경험은 한 안보문제에 대한 민감성에 영향을 준다.

둘째, 문헌 검토 등을 통해 전통적 전략문화가 현재의 안보의식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 지를 분석한다. 특히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전쟁관, 적에 대한 인식, 무력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전략이 공격지향적인지 방어지향적인지를 분석한다.

셋째, 주요 안보문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략문화가 전략적 행동 혹은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13) Alan Macmillan and Ken Booth, "Appendix: Strategic Culture - Framework for Analysis," in Booth & Trood, eds., *Strategic Cultu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pp. 363~64.

14) 이 분석틀은 존스톤(Alastair Iain Johnston)과 맥밀란·부스(Alan Macmillan & Ken Booth)가 제시한 분석틀을 필자가 북한연구를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다.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and Strategy in Maoist China,"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Macmillan & Booth, "Appendix: Strategic Culture," 참조.

Ⅲ. 북한 전략문화의 형성 요인

북한의 전략문화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가 겪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에는 새로운 요인들이 개입되었다. 특히 분단 이후 한국전쟁의 경험과 주체사상의 도입은 북한의 전략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 지정학적 요인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대륙 및 러시아와 인접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대한해협을 사이로 일본과 접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국의 침략을 빈번히 받아왔으며, 또 육교적인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통일국가가 출현했을 때마다 한반도에 대한 침략이 자행되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대륙에서의 최초의 통일국가로서 한무제의 통일국가형성이 한반도에서 한사군 식민통치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후, 수나라, 당나라, 몽고 등이 한반도를 침략하였다. 아울러 일본도 대륙침략의 가두교로서 한반도의 정복을 꾀하며, 임진왜란 등 여러번의 침략을 시도하였다. 특히 19세 말 이후 한반도는 주변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및 소련의 점령으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는 국토분단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 영향으로 한반도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거나 주위로 영향력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영토를 보존하고 주변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방어적 전략을 지향하였다.¹⁵⁾

2. 역사경험적 요인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주변국의 침략으로 900회 이상의 전쟁을 경험하였다. 특히 13세기 몽고의 침략, 16세기 일본의 침략, 17세기 청나라의 침략시에는 한반도 전체가 전장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외세침략의 경험으로 한국에서는 안보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한국인들은 외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강한 집단 의식과 민족주의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¹⁶⁾

한편, 한국은 일반적으로 주변국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 보존함에 있어서 군사적 수단 못지 않게 외교적 방법을 중요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 조공을 받치고 사대의 예를 갖추는 사대외교라고 할 수 있다. 사대란 국가간의 관계를 상하의 계서적 관계로 놓고 그 관계를 조공의 예로 제도화한 것이었다. 또한 사대의 예는 아시아에서 문명국 사이의 예법이었으며, 조선은 이 사대적 예의 외교에서 문명인 대우를 받았으며, 주변국들은 이러한 대우와 지위를 받기 위해 중국에 조공을 자진하여 바치려 했다.

15) 강영오, 「한국의 군사전략사론」 (서울: 연경출판사, 1991), pp. 69~83.

16) 김운태,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4), pp. 230~3.

이와 같은 조선의 중국과의 사대적 예의 관계에서는 조선측에 유리하고 실리적인 측면이 있다. 즉, 천자의 나라인 중국의 황제로부터 왕권일 인정 받아 위신을 높이고 왕조의 정당성과 명분을 얻어 왕권을 유지하고, 조공을 통해 교역을 하며 소중국이라는 문화적 우월감을 갖게 되고 필요시 중국의 중재와 원군을 받게 되었다. 즉, 조선시대의 사대외교는 중국을 섬기고 친선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자주성은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 영토적 통합성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안보외교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분단의 영향

소련의 후원으로 북한 정치의 전면 등장하게 된 김일성은 소련을 “민족의 해방자”로 규정하며, 소련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김일성은 1946년 3월 소련은 “우리 조선 민족을 해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를 물심량면으로 도와 주고 있는,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벗”이라며, “위대한 소련 인민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에 반해 김일성은 미국을 일본에 이은 또다른 제국주의 세력으로, 그리고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을 ‘민족반역자’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46년 5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격문은 “민족반역자 김구·이승만...일본제국주의자의 대리인들과 결탁해 가지고 조선을 다시 변상적(變相的)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17) 「김일성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 53.

있다. 즉, 미국을 ‘얼굴만 바꾼 제국주의’로 인식한 것이다.¹⁸⁾

1948년 2월 유엔 임시 총회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는 남한에서 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북한은 이를 유엔을 앞세워 남한에 “괴뢰정권”을 세우고, 한반도를 분열시키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에 창설된 민주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⁹⁾

앞의 언급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김일성은 소위「민주기지론」을 기반으로 반미·반제 투쟁 펼치려 하였다. 「민주기지」란 원래 스탈린의 통치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확고히 한 다음 세계혁명을 위한 수출기지로 삼는 것을 말한다. 김일성은 1945년 12월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하였으며,²⁰⁾ 이에 따라 ‘반제국주의적·반봉건적 민주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내의 정치·경제적 체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인민군대’를 창설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국회가 구성되자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영원히 식민지화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명분 하에 “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 조선 최고 입법기관을 수립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정권 수립에 박차를 가하였다.²¹⁾

18) 북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檄(1946년 5월 19일), 통일원 소장 미군탈취문서,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출판사, 1996), p. 243에서 재인용.

19) 「김일성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p. 99~112, p. 177.

20) *Ibid.*, p. 27.

21) *Ibid.*, p. 233.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설립으로 분단이 공식화된 이후 김일성은 이승만 정권을 ‘미제국주의자들의 괴뢰’로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최대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²²⁾ 통일에 전력하였다.

김일성은 정권수립 바로 다음날인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을 발표하였는데, 그 첫 번째 항목에서 미·소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²³⁾ 이후 김일성은 ‘국토완정론’을 통일의 주요 화두로 삼았다. 1949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모든 것을 국토완정을 위해서 바치자”고 역설하며, “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고.....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인 남조선 괴뢰 ‘정부’의 온갖 매국적 협정들을 청천백일하에 폭로하며.....국방군의 애국적 의기운동과 남조선인민들의 항쟁을 긴밀히 결속시켜 망국 괴뢰정부를 타도 분쇄함으로써 국토의 완정과 완전 자주독립을 촉진시키라”고 강조하였다. 즉, 김일성은 국토완정을 통일과 동일시하며, 북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주독립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토완정론을 제시한 것은 민주기이론에 입각한 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제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²⁴⁾

무력통일에 대한 김일성의 입장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 외교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²⁵⁾ 이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현 상황에서 평

22) *Ibid.*, p. 326.

23) *Ibid.*, p. 270.

24) 국토완정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서울: 나남출판사, 1996), pp. 83~91 참조.

25) 1994년 6월 2일 러시아 정부는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 사이에 작성된 한국전쟁관련 외교문서를 한국정부에 제공하였으며, 한국 외무부는 7월 20일 이 자료들을 한글 요약본과 함께 공개하였다. 이 문서에 나타난 내용

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무력통일 준비에 골몰해 있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통일의 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스탈린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남침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주평양 소련대사였던 슈티코프(Terenti Shtykov)는 김일성이 “항상” 남침계획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정도다.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은 남한의 선제공격을 우려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에는 남한이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가 수차례 입수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승만이 “자유롭게”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은 무력침공을 빨리 시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은 지연될 것이며, 그 동안 남한이 군사력을 길러 북한을 먼저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 및 남침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스탈린은 1950년 4월 국제적 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하였음에 주목하며 북한의 남침에 동의하였다. 김일성은 계획했던 대로 1950년 6월 16일 평화통일안의 남한에 제의하였으며, 남한이 이를 거부하자 6월 25일 전면전을 개시하였다.

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으나, 김일성의 전쟁관을 검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문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Kathryn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3, No. 4 (Winter 1994), pp. 1~33; Hakjoo Kim, "Russian Archives on Originis of the Korean War," *Korea Focus*, Vol. 2, No. 5 (September-October 1994), pp. 22~3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등 참조.

4. 전쟁의 경험: 한국전쟁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한 다음날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한 방송연설”에서 “매국 역적 리승만 괴뢰 정부의 군대”가 6월 25일 38선 전역에 걸쳐 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시도하였으며, 그 “배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리승만 매국 역도들이 일으킨 동족 상잔의 내전을 반대하여 우리가 진행하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²⁶⁾ 미국이 참전하자 북한은 미국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쟁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미국이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⁷⁾

미군과 유엔군의 성공적인 반격에 의하여 북한은 38선 이북으로 후퇴하여 압록강변까지 밀리기도 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완전 패배에서 구출되었다. 이후 전선이 38선 근처에서 소강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휴전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1951년 7월 마침내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휴전회담의 수용을 다음과 같이 합리화 하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여 정복하려다 그것이 “실패”하니까 싸움을 중지하자고 요구하였으며, “평화를 애호”하는 북한으로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²⁸⁾

26) 「김일성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pp. 1~12. 북한은 1950년 5월초에 남한이 이북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고,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할 수 있었다는 논리로 남침을 부인하려 하였다. Ibid., p. 105.

27) Ibid., pp. 17~31.

28) Ibid., pp. 269~70.

이 논리는 후에 북한이 한국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장하는데 그대로 쓰이게 된다. 김일성은 1953년 8월 3일 발표된 “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변하였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적 모험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이 조선 전선에서 당한 만회할 수 없는 군사, 정치, 도덕적 패배로 말미암아 또한 조선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조-중-양국 인민의 완강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여론과 압력에 의하여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은 자기의 조국해방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²⁹⁾

위에서 살펴본 한국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입장을 요약하면,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의 ‘피뢰정부’를 앞세워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북한은 이에 대항한 ‘정의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소극적으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책임 및 통일이라는 전쟁목적 달성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적극적으로는 반미·반제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이전에도 이미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한 즉시 미국을 ‘제국주의적 침략자’로 그리고 남한의 이승만 정부를 그 ‘주구’로 규정하였으며, 그들이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미국 및 남한에 대해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많은 북한 주민들도 반미사상 교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29) 「김일성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p. 1~3

이론적으로만 자리잡고 있던 반미·반제사상을 실제화 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우선 김일성 자신에게 있어서 이념적·권력투쟁적 입장에서 말로만 되풀이한 반미감정과 실제로 미국의 가공할 위력을 체험한 후 느낀 반미감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적화통일'이라는 김일성의 꿈을 무산시켰다는 점은 김일성의 반미감정을 매우 고조시켰다. 이와 관련 김일성은 일찍이 1950년 7월 8일에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벌써 종식되고 통일이 달성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³⁰⁾ 사실 김일성은 미국이 직접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며, 개입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동안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침을 시도하였다.³¹⁾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무력침공 즉시 참전을 결정하였으며, 김일성의 적화통일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궤멸 일보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김일성은 미국이 있는 한 무력통일은 불가능함은 물론, "평화통일(비폭력 혁명에 의한)" 역시 "단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을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³²⁾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좌절감은 바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의 경험은 북한 주민들의 반미감정에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 이전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던 반미의식은 단지 위로부터 주입된 매우 추상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에 의한 전쟁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미제의 실체'를 확인

30) 「김일성 선집 3」, pp. 17~31.

31) 「한국전쟁관련 러시아 외교문서」.

32) 「김일성 선집 4」, p. 190.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대미 적개심은 상당한 정도로 내면화되었다.³³⁾ 전쟁기간 북한은 미국의 포격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미국은 635,000톤의 폭탄과 32,557톤의 나뭇탄을 북한에 떨어트렸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에게 사용한 폭탄 총량(503,000톤)보다 많은 것이었다. 미국측 분석에 의하면 미공군의 폭격으로 북한의 공업 및 주거 시설의 2/3 내지 3/4가 파괴되었으며, 나머지도 주변 시설의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음식, 피복, 주거지의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은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다다른(bordering on panic)”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말로만 듣던 “미제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군의 북한점령 기간중 저지른 살상과 파괴행위 등은 북한주민의 반미의식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이는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고 마태오 신부와 그의 조카와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서 일부 확인될 수 있다.

.....뚫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낱알이 여물기만 기다리던 전답의 곡식을 불살라 버리고 또 아무런 군사시설이 없는 평화스러운 새벽에 폭격으로 진동시켜 할아버지와 여러 형제가 화염에 싸여 죽게한 것도 미국군인의 소행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움을 배웠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³⁵⁾

33)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194-95; 김명섭, “분단 구조화의 과정에서 본 한국전쟁의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pp. 118~20 참조.

34) *FRUS, 1952-1954, Vol. XV*, pp. 467~70, September 1, 1952.

35) 고 마태오 신부, 『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 (서울: 중원문화, 1988), p. 111. 미군의 파괴 및 잔악행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pp. 169~180 참조.

이와 같이 전쟁의 경험은 반미의식을 확대 재생산 시켰으며, 더욱 경직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은 군사적, 공세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체험하였고, 아울러 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북한의 전략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방어적 전략의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은 공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방어적 측면을 고려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5. 정치문화: 주체사상

북한의 군사정책은 ‘남조선혁명에 의한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통일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남조선 혁명북한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동당 규약은 “조선인민군은 항일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승계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군대의 임무와 군사력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군사정책도 이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있다.

북한의 ‘남조선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정책 노선은 1970년대에 들어와 주체사상과 접목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와 요구는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위치규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의 주요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

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성격규정에도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주체사상에서는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국통일을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⁶⁾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주체사상의 한 기둥으로서 국방에서의 자위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자위력을 강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당시 심화되고 있던 중·소이념분쟁이었다. 북한은 쿠바사태시 소련이 미국과 군사적 대결의 위협을 무릅쓰기보다 미국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한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소련이 원조를 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소분쟁으로 공산권의 분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이 북한을 친중공적이라고 보고 군사와 경제원조를 삭감하는 등의 상황변화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휴전이후에 경제적인 회복과 발전에서 이루어진 상대적인 성공과 자신감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립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³⁷⁾

북한의 군사적 자주 노선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구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론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36)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37) 한승주,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김준엽·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 법문사, 1982), pp. 256~57.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결의하였다.³⁸⁾ 이후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노선이 “전쟁, 특히 현대전쟁의 제반요구를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우리 인민자신이 직접 체험한 혁명전쟁의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철저히 자체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국방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길을 명시한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로선”이라고 강조하였다.³⁹⁾

자위적 국방건설과 관련 북한은 소위 ‘자위노선’의 본질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추구한 자위정책의 목표는 첫째 북한 스스로의 필요성 및 한반도의 상황에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둘째 독자적인 군사 전략을 개발하는 것, 셋째 북한의 남한 공격에 따른 남한과 미국에 의한 반격 또는 보복의 경우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방어 및 저항체제를 확립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필요할 때 대남혁명전략에서 독자적 군사행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을 확보코자 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기본적으로 맑스의 계급투쟁론에 입각해 전쟁을 정의하고 있다. 북한 「정치사전」은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며 “일정한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사회계급 또는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한다. 아울러 “전쟁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계급사회의 소멸과 함께 없어진다. 일정한 계급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멀어진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⁴⁰⁾

38)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p. 157~163.

39) “우리 당 군사노선의 정당성,” 「근로자」 1968. 7, pp. 25~33.

40)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744~45.

또한 북한은 전쟁의 종류를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 전쟁’의 양단 논리로 구분하고, ‘정의의 전쟁’을 “반동계급들과 그들의 통치기관을 약화시키거나 소탕하고 피압박 인민들을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전쟁”이라고 하며, 세계의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전쟁과 이러한 지역에서 독립하기 위해 싸우는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부정의 전쟁’이라고 한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수행하거나 앞으로 수행할 전쟁을 모두 ‘정의의 전쟁’으로 판정짓고 있다.

북한 전쟁관의 핵심은 전쟁 불가피론이다. 전통적인 맑스주의를 따라서 북한은 전쟁의 원인을 계급제도에서 찾고 있다. 사회에서 계급이 없어질 때에만 전쟁이 없어지며, 계급 없는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를 세우는 길만이 전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해 있고,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반제 투쟁이 필요한 이상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IV. 북한의 안보전략

1. 핵무기 개발 전략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후 김일성은 사회주의 정권인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며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김일성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소련과 중국의 지원 하에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의 참전으로 김일성의 무력통일 기도는 무산되었고 한반도는 다시 분단상태로 남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가공할 군사력을 확인한 김일성은 미국을 북한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중국 및 소련의 힘을 빌어 이에 대처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미국을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은 “철천지 원수”로 규정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대미 적대감을 고양시킴으로써 이를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데 활용하였다.

냉전체제 하에서 김일성은 남한 및 미국과 비록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적대적 대립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⁴¹⁾ 소련 및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과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주는 한 김일성은 미국을 주적으로 그리고 한국을 종적으로 규정하여 이들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는 물론 정권안보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41) 냉전시대 북한의 대미·대남관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할 것: 김계동, “북한의 대미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4집 2호(1994), pp. 71~97; 허문영, “북한 외교정책 변천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II』 (서울: 집문당, 1995), pp. 481~530.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김일성은 기존의 정책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동구사회주의 시장의 소멸 등으로 인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식량·에너지·외화의 부족과 같은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임은 물론 '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주체사상의 한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즉 경제난은 내부로부터 김일성의 통치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냉전체제의 와해와 함께 김일성이 직면하게 된 보다 중대한 문제는 북한안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었다. 우선 국제적 차원에서 동구 사회주의체제 및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지난 50년간 적대국으로 간주해왔던 미국 주도하의 신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⁴²⁾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이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앞질렀으며, 특히 남한이 러시아, 중국 및 구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고도의 안보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⁴³⁾

김일성은 불리한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를 회복하고 안보위기를 해

42) 탈냉전기 신국제질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Zbigniew Bresinski,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256 (Winter 1991/92), Joseph S. Nye,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43) Andrew Mack은 90년대 초반 북한이 처한 대외환경을 남한의 입장에 적용함으로써 북한이 인식하던 위기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① 러시아가 주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미국은 지도적 위치를 상실함. ② 북·러관계가 우호적이고 37,000명의 러시아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반면, 한미관계는 냉각되고 남한 내에 미군이 존재하지 않음. ③ 러시아, 북한, 일본이 밀접한 군사적 협력관계 속에서 핵무기 적재가능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함. ④ 남북한간의 군사균형이 빠른 속도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됨. Andrew Mack,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3, No. 4 (April 1993), p. 344.

소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핵문제를 활용하였다. 즉 자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북한에 대한 ‘핵불사용보장’ 요구를 통하여 남한 및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

북한은 이미 1956년경부터 원자력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탈냉전기 안보위기의 증대와 함께 북한은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⁴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로 군사적 필요성, 대내 정치적 유용성, 그리고 외교적 협상카드로의 활용성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⁴⁵⁾

우선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상실해 갔으며, 소련 및 중국이 더 이상 군사동맹국으로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군부의 환심 확보, 주민들의 내부동요 방지, 김일성 역량의 대내외적 과시 등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적 협상수단과 관련, 북한은 안보위기 및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적 위기극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핵무기 불투명성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핵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핵위협을

44) 중국에서 탈출한 馬仲可 교수는 1992년 여름 중국까지 한국과 수교하자 김정일이 “이제 믿을 것이라곤 핵무기밖에 없다”라며 핵개발을 독려했었다고 언급하였다. 자유총연맹 주최 세미나, 1993년 9월 13일, 이준근, 「북한 핵의 문제: 발단, 협상과정,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 179에서 재인용.

45) 북한의 핵개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위의 책, pp. 177~95;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5~28.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북한은 1990년 4월부터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1990. 5),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안」(1991. 7) 등을 통하여 남한 배치 핵무기의 즉각적인 철수, 핵무기의 생산·구입 금지,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항공기 및 함선의 한반도에로의 출입·통과 금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미·중·소 등 주변 핵보유국의 법적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⁴⁶⁾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한반도 내에서 핵의 제조·보유·반입 금지 외에 제3국 핵의 영해·영공 출입까지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미 해·공군에 의한 핵출입마저 봉쇄하여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남한내의 미군 지상 핵탄頭的 철수를 의미하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1991. 12)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가 노태우 대통령의 「남한내 핵부재 선언」 등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12월 중순 소련이 완전히 해체되는 등 국제환경도 북한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북한은 미국 핵우산의 소멸을 의미하는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1991년 12월 31일 남한의 제안에 기초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⁴⁷⁾

「비핵화 공동선언」은 12월 13일 남북한간에 서명된 「남북사이의

46) 「로동신문」, 1990. 6. 2, 1991. 7. 30.

47) 이 선언의 주요내용은 ①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철수·보유·저장·배비·사용의 금지,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핵사찰 실시, ⑤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되어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pp. 10~12.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⁴⁸⁾ 두 문서의 채택은 당시 남북한간에 화해 및 동반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선언」 및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한으로부터 미국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물론 체제인정 및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남북대화 및 남북경협 등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애초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꺼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실시할 경우 수반될 수 있는 내부 동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⁴⁹⁾ 즉 김일성은 비록 국가안보적 위기의 탈피를 위하여 남북관계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그것이 체제 및 정권의 안정성을 흔들 정도로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김일성 정권은 실제 핵무기 보유자인 미국으로부터 직접 북한에 핵안전보장을⁵⁰⁾ 확약 받고자 하

48) 「남북기본합의서」는 제3자의 개입 없이 남북간의 공개적 협의를 거쳐 채택·발효된 최초의 공식 합의문서로서, ①상호 체제인정 및 내정불간섭, ②비방중상 및 파괴·전복 행위 금지, ③군사협정의 준수, ④무력사용 및 무력침략 금지, ⑤경제교류와 협력 실시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서울: 통일원, 1992) 참조.

49) 한·중 국교 정상화(1992. 8), 남한에서의 문민정부 출범(1993. 2) 등으로 주변 여건이 북한에게 더욱 불리해짐에 따라 남북관계개선의 대내 부작용에 대한 북한의 우려도 커졌을 것이다.

50) 핵안전보장에는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과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 있다. 「적극적 안전보장」이란 비핵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핵국이 해당 비핵국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안전보장(NSA)」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들에게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금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한 핵안전보장은 「소극적 안전보장」, 특히 '조건없는' 核不使用을 의미한다. 미국은 「소극적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조건 및 예외규정을 둔 정책을 표명하

였으며,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 보다는 북·미협상에 비중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화되고,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과 IAEA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자,⁵¹⁾ 북한은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함은 물론 북한에 대한 핵무기의 불사용을 먼저 보장해야만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²⁾

특히 1993년 3월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미국의 사주에 의한 북한에 대한 “핵위협과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 번복의 조건으로 핵불사용 담보 공약 등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미국에게 NPT 복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①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 ②한국내 핵기지에 대한 사찰, ③핵공격 불사용의 약속, ④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포기, ⑤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존중 등을 제시했다.⁵³⁾ 요컨대 북한은 남한과의 회담에서 실패한 핵우산 제거와 핵안전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확

여 왔다. 즉 “NPT에 가입했거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유사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고 선언하였다: 미국 영토나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이 “핵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지원을 받는” 비핵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조건적’ 핵안전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핵안전보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성훈, 「1995년 NPT 연장회의와 한국의 대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84~189 참조.

51) 북한은 198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NPT 가입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하는 핵안전조치 협정 체결의무 이행을 계속 지연시켜 왔다.

52) 「로동신문」, 1991. 9. 29; 김일성도 중국 방문시 미국의 핵이 철수할 경우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선일보」, 1991. 10. 18.

53) 「중앙방송」, 1993. 3. 29; 「세계일보」, 1993. 4. 22.

약 받으려고 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NPT 탈퇴라는 ‘협박외교’를 구사한 것이다.

핵확산 저지를 탈냉전기 신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NPT 탈퇴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결국 1993년 6월 북한과의 제1차 고위급회담을 뉴욕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단지 NPT 탈퇴 유보를 선언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상호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등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지속을 합의함으로써 대미 채널개설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⁵⁴⁾ 한달 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북·미 회담에서 양측은 핵안보보장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의 일환으로 경수로 도입을 모색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북미회담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로 말미암아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북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대미관계개선 방향으로 나아갔다.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를 통하여 “자주권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대미관계개선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4월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제의하였다.⁵⁵⁾

1994년 6월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카터 전미국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하여 7월초에 북·미고위급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54) 제1단계 회담 직후 북한측 대표 강석주는 북·미간의 합의로 “지난 40년간 지속되어온 쌍방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중앙방송』, 1993. 6. 19.

55) 『로동신문』, 1994. 1. 1; 『중앙방송』, 1994. 4. 28.

함께 김일성은 카터를 통하여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고, 마침내 남북한은 7월 25~27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김일성이 7월 8일 갑자기 사망하였으나 북한은 북·미회담의 조기 속개의사를 밝히는 등 대미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⁵⁶⁾ 1994년 8월 5~12일에 개최된 북·미 3단계회담 제1차 회의에서 북한은 종전과는 다르게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 등 정치적 성격의 문제들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유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북한의 적극성과 이에 대한 미국의 호응에 힘입어 북·미 양국은 마침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문」을 체결하였다.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문」 채택을 통해 김일성이 생존시 안보위기 탈피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미국으로부터의 핵안전보장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제공”한 것이다. 김정일은 또한 경수로 지원 및 중유공급, 그리고 무역 및 투자제한 완화라는 경제적 실리, 연락사무소 개설합의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⁵⁸⁾ 따라서 북한은 「제네바 합의문」을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과 조·미 관계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이며 두나라 국가수반들이 보증한 무게 있는 문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을 통해 미국과의 “비정상

56) 북·미회담 북측 대표 강석주는 김일성 사망 3일 후인 1994년 7월 10일 갈루치 미국측 대표와 만나, 장례식(17일) 1주일 후쯤 뉴욕에서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57) 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북한의 핵활동 동결, 대북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 상호 외교대표부 설치, 미국의 핵불사용 담보 제공용의 표명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성명을 발표하였다.

58)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7.

적인 적대관계는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되게 될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김정일 정권은 「제네바 합의문」 체결은 북한의 “확고한 자주적 입장과 일관한 평화적 핵활동 평화통일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대외적 권위가 비상하게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⁵⁹⁾

2. 미사일 개발 전략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사·안보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1960년대부터 주체사상에 입각한 “군사에서의 자위”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바로 이와 같은 독자적 군사력 확보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습공격과 속전속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군사전략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의 국제정세와 남한의 국방현대화계획 및 이에 따른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욕을 더욱 자극하였다. 따라서 초기 스커드 미사일의 개발은 주로 대남전략의 차원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군사적·공격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도 바뀌기 시작했다. 즉, 체제위기를 맞이한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사일 개발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88년경부터 시작한 사정거리 1,000km의 로동 미사일 개

59) 「로동신문」, 1995. 1. 1.

발이 늦어지자, 1990년대 초에 구소련으로부터 기술자들을 데려오고 중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북한은 로동 1호가 완성되기도 이전부터 로동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긴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⁶⁰⁾ 이와 같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생산을 서두른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원썩'였던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짜여지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로동과 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서⁶¹⁾ 이 미사일들이 대남전략 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그들의 단거리 미사일도 효율성과 정확도에 있어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분쟁시 남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남한 주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심어 줄 것이다. 또한 북한 관리들은 대포동 미사일의 보유로 남한 정부가 “덜 오만하고, 보다 심사숙고하며,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⁶²⁾

그러나 로동 1호 미사일의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목표는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나 미국의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에 증파될 일본 오키나

60)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개발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93년 9월 미국 하원의 외무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북한이 사정거리 1,500~2,000km의 로동 2호(대포동1호 미사일의 당시 호칭)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1993. 9. 16.

61)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최대사정 거리의 20~30% 정도밖에 거리의 하향 조정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일 최대 사정거리가 1,000km라면 대개 700~1,000km가 공격범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동 1호 미사일은 한반도 북단(압록강)부근에서 발사한다고 한국의 영토를 거의 표적으로 삼을 수 없다.

62) CNS, "The DPRK Report," No. 19.

와 및 여타 기지 주둔 미군이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로 제압될 경우 이들이 군사적 기동성과 효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황장엽씨는 탈북 이전에 기술하였다는 「조선문제」라는 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조기에 남한, 특히 수도권 지역을 석권한 다음 주일 미군과 미본토 출발 증원군의 도래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지적한 바 있다.⁶³⁾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 동기는 이러한 공격적 차원 보다 방어적 차원의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또는 미·일 연합군이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북한도 전략미사일로 일본 본토는 물론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대미·일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남조선혁명’ 전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냉전체제 와해 이후 북한, 남한 및 국제사회에서의 혁명 역량이 약화되자 대남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최대·최종목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체제유지’(최소·당면목표)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탈냉전기 북한의 미사일 전략도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걸프전에서 보여준 ‘사막의 폭풍’ 작전, 코소보 사태 개입 등을 목격하면서 미국의 위력에 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걸프전쟁을 교훈으로 하이테크에 견뎌낼 수 있는 전술을 개발, 전력을 보완하는 등 전시 주요지휘계통을 지하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코소보 전쟁에 대해 걸프전쟁 당시에 못지 않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공중폭격에 대비해 유고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유고정세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없

63) 「조선일보」, 1997. 4. 21.

이는 '제2의 유고슬라비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되었다.⁶⁴⁾ 즉,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위협(counter-threat)”이 있어야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고슬라비아형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⁶⁵⁾

따라서 북한이 사정거리 1,500~2,200km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고, 사정거리 4,000~6,000km의 대포동 2호에 이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0km의 대포동 3호 미사일을 개발 중인 가장 큰 이유는 방어적 차원에서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위협을 통해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이득은 물론 안보적 보장까지 확보하려고 하였다. 미국이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일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보고, 1996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하자 북한은 ‘미사일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과 미국간의 첫 번째 미사일 회담은 1996년 4월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은 회담의 성격, 의제, 추후 일정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을 타진한 일종의 탐색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사일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북간 군사접촉 통로 확보 및 대미 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미사일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부품·완제품의 수출금지 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개

64) *Wall Street Journal*, July 6, 1999. 북한은 미국의 코소보 개입을 “힘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이 나라의 영토완정을 해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중앙방송』, 1999. 6. 18.

65) CNS, “The DPRK Report,” No. 19.

발 및 생산 중지, 생화학 무기 생산중단 등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자국의 체제 안전보장, 북미평화협정, 주한미군의 미사일 철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 포괄적인 군사·안보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개발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한미측의 시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미사일 회담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손쉽게 압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사일은 주한미군의 위협에 대한 자위수단임을 강조하였다.⁶⁶⁾

북미간의 제2차 미사일 회담(97.6.11~13, 베를린)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배치·수출에 중단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촉구한 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적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997년 8월 제3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거래 실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승길 주이집트 대사 일행의 망명을 허용하자 북한은 미사일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미사일 회담 재개를 요구하였으며, 양측은 1998년 6월 중순 외교적 실무채널을 통해 7월중 제3차 회담을 재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북한이 느닷없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수출 사실을 시인하였다. 북한은 1998년 6월 16일 “우리의 미사일 수출은 당장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은 진정으로 우리의 미사일 수출이 중단되기를 원한다면 하루 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미사일 수출 중단으로 야기되는 우리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동안 미사일 수출의혹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취해온 북한이 돌연 미사일 수출을 스스로 확인하고 나선 것은 이를

66) 『로동신문』, 1996. 4. 18.

본격적인 대미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사일 포기로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증가시키려는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연간 5억달러를 지원한다면 이란 등 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 수출계획을 자진해서 중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도 하였다.⁶⁷⁾

북한은 8월 31일 미사일 문제를 비롯 북·미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이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시기에 대포동 1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군사·정치·경제적 동기와 함께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1998년 10월 개최된 및 제3차 북·미 미사일회담에서 '자주권'을 다시 한번 내세우는 한편 미국이 3년간 10억 달러를 지불할 경우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미사일 수출 중단 보상액을 2배로 증가시킨 것이다.

1999년 2월 북한과 미국이 제4차 미사일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은 또다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언행을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의 이근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2월 10일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말하며, 지난 8월에 이어 광명성 2호와 3호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또다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어 이근 차석대사는 북한이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진지하게 벌일 준비가 돼 있으며, 자국에 대한 보상 정도에 따라 향후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그는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쌍무

67) *Washington Post*, June 20, 1998.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⁶⁸⁾

이러한 입장은 북·미간 금창리 핵협상 타결⁶⁹⁾ 직후 열린 제4차 미사일 회담(99.3.29~30)에 그대로 반영되어 북한측은 ‘미사일 수출’을 ‘현금보상’에, ‘미사일 개발·생산·배치’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에 연계시는 등 경제적 보상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회담은 다시 결렬되었다.

1999년 5월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 페리는 평양을 방문, 한·미·일이 공동으로 준비한 대북 포괄적 접근안을 북측에 설명하였다. 이 안은 북한이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수출과 개발을 중단할 경우에 이에 맞추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당시 미국의 정찰 위성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엔진연소실험, 발사대 증축, 연료통 설치 및 연료 채우기 등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포착되었다. 이에 한·미·일 등 주변국이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는 북한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발사 준비를 계속하는 한편,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위적 조치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명분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⁷⁰⁾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은 미사일 개발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한·

68) 「중앙일보」, 1999. 2. 12.

69) 북한은 금창리 핵의혹 시설 문제에 대한 북미협상에서도 미국 조사단의 현장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양국의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약속 받았다.

70) 「중앙방송」, 1999. 7. 15; 「로동신문」, 1999. 7. 18.

미·일로부터 최대한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위협을 통해 이미 1998년 대포동 발사로 강화된 자신의 협상력 더욱 높이면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면 페리가 제시한 것 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그들이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 문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7월 이후에는 미국과의 협상 용의를 시사하기 시작한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7월 26일 "우리는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지 않으며 우리의 자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선의로 대한다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8월 2일에는 미국에게 경제제재 전면 철회, 군사위협 중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 하며,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협상에 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⁷¹⁾ 또한 8월 초 개최된 제6차 4자회담에 참석한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은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 보다 직접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그만두면 미사일 발사중지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용순 노동당 비서는 CNN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무기는 방어용이다. 작년에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이었다.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빵을 갖고 오면 빵으로 응대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칼을 들이대면 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마침내 8월 18일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를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이에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북한에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조치를

71) 「평양방송」, 1999. 7. 26; 「로동신문」, 1999. 8. 2.

취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⁷²⁾ 결국 미국과 북한은 9월 12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국이 적성국교역법 따른 대부분의 대북경제체재를 해제하고, 북한은 이에 상응,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발사는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⁷³⁾

2000년 10월 미국을 방문한 북한의 조명록 차수는 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한측은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대신 미국으로부터 ‘적대관계 청산’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72) 「중앙일보」, 1999. 8. 20.

73) 북-미 양측은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V. 결론

북한의 전략안보에 있어서 문화적·전통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강대국에 둘러 쌓인 약소국으로서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수많은 침략을 겪으면서 주로 방어적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아울러 안보를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였다.

우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국의 침략을 빈번히 받아왔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기존의 영토를 보존하고 주변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방어적 전략을 지향하였다. 아울러 사대외교를 통해 중국을 섬기고 친선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토적 통합성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안보외교전략을 구사하였다.

해방 이후 소련이 한반도의 38선 이북을 점령하면서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혁명 전쟁관을 갖게되었다. 또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한과의 대립 속에서 북한은 “미제국주의”와 “남한괴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갔으며, 통일의 필요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공격적 전략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50년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침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는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전쟁의 경험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강한 반미의식을 갖게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은 군사적, 공세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가공할만한 위력을 체험하였고, 아울러 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북한의 전략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방어적 전략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은 공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내면적으

로는 방어적 측면을 고려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탈냉전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북한의 안보전략에는 전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방어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투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체제안보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핵개발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핵카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안전보장을 약속 받고자 하였다. 결국 북한은 버락 오바마를 통해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문」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핵안전보장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미사일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방어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주로 공세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변환경이 변화하면서 점차 방어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미국의 잠재적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선제 공격용 무기가 아닌 대미 억제력 차원에서 미사일을 활용한 것이다. 결국 북한이 ‘불량국가’, ‘테레 지원국’, ‘비합리적인 국가’라는 비난, 경제적 손실 및 외교고립,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 및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및 미사일 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북한은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적대관계 청산」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이

를 인정치 않고 원점에서부터 북미대화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북한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기반하여 북·미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안전보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미사일 카드 등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행동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북한의 최대·장기적 목표인 체제안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 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국문

- 김계동. "북한의 대미정책." 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34집 2호. 서울: 국제정치학회, 1994.
- 김일성. 「김일성 선집 1,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64.
- 장영오. 「한국군사전략사론」. 서울: 연경출판사, 1991.
- 김운태.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4.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 II」. 서울: 나남출판사, 1996.
-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제2권. 평양: 인문과학사, 1970.
-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이춘근. 「북한 핵의 문제: 발단, 협상과정,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1995.
- 전성훈. 「1995년 NPT 연장회의와 한국의 대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통신사, 1963.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서울: 통일원, 1992.
- 한승주.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김준엽·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2.
-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대외관계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대외관계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 영문

- Adams, Martin P. "Peace Enforcement vs. American Strategic Culture." *Strategic Review*, Vol.23 No.1.
- Anand, R. P. ed., *Cultural Facto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Delhi: Abinhav, 1981.
- Baldwin, David A.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3, no. 1 (January 1997).
- _____.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48, no. 1 (October 1995).
- Booth, Ken. *Strategy and Ethnocentrism*. New York: Holmes & Meier, 1979.
- _____.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ffirmed," in Carl G. Jacobsen, ed., *Strategic Power: USA/USSR*. London: macmillan, 1990.
- _____. "Security and Emancip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7, no. 4 (1991).
- Booth, Ken and Trood, Russel. eds. *Strategic Cultu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London: Macmillan, 1999.
- Bresinski, Zbigniew.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256

- (Winter 1991/92).
- Buzan, Barry. *People, States &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2nd ed.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 _____. 1988. "People, States and Fear: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 in the Third World," Azar and Moon, eds. *Natio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The Manage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Aldershot: Edward Elgar
- Chay, Jongsuk. ed.,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raeger, 1990.
-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CNS). "DPRK Report" No. 19 (July-August 1999). <http://cns.miis.edu/pubs/dprkrprt/99junlaug.htm>.
- Davis, M. Jane, ed. *Security Issues in the Post-Cold War World*. Cheltenham: Edward Elgar, 1996.
- Desch, Michael C. "Culture Clash: Assessing the Importance of Ideas in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Summer 1998).
- Elgstrom, Ole. "National Culture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29, No. 3 (1994).
- Farrell, Theo. "Culture and Military Pow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4 No.3.
- Glen Fisher. *Mindsets: The Role of Culture and Percep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1988.

- Gray, Colin S. *Nuclear Strategy and National Style*. Lanham, Md.: Hamilton Press, 1986.
- _____.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Strategic Culture as Context: The First Generation of Theory Strikes Back,"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5 No.1 (Spring 1999).
- Fukuyama, Francis. "The Primacy of Culture," *Journal of Democracy*, Vol.6 No.1.
- Fussell, Paul. "The Culture of War," *Society*, Vol.33 No.6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2 (Summer 1993).
- Johnston, Alastair Iain.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4 (Spring 1995)
- Katzenstein, Peter J. *Cultural Norms & National Secur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Kim, Hakjoon "Russian Archives on Origins of the Korean War," *Korea Focus*, Vol. 2, No. 5 (September-October 1994).
- Kim, Jong Wan. *The Korean Political Culture in Conflict : Hierarchy vs. Individualism*. Seoul: Sejong Institute, 1998.
- Legro, Jeffrey W. "Culture and Pre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wo-Ste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0 No.1

- _____. "Military Culture and Inadvertent Escalaton,"
International Security, Vol.18 No.4 (1994).
- Levy, Marc A. "Is the Environment a National Security Issue?,"
International Security 20, no. 2 (Fall 1995).
- Mack, Andrew.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3, No. 4 (April 1993).
- Mazarr, Michael J.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Review
 Essay," *Washington Quarterly*, Vol.19 No.2.
- Nye, Joseph S. and Lynn-Jones, Sean M.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Security* 12, no. 4 (Spring 1988).
- Park, Jae Kyu,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9.
- Peterson, Peter G. "The Primacy of the Domestic Agenda,"
 Graham Allison and Gregory F. Treverton, eds.
*Rethinking America's Security: Beyond Cold War to
 New World Order*. New York: W. W. Norton, 1992.
- Ross, Marc Howard. *The Culture of Conflict Interpretations and
 Interes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Spector, Ronald H. "The Culture of War," *National Interest*, No.35
 (1994).
- Ullman, Richard H. "Redefining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8,
 no. 1 (Summer 1983)
- Walt, Stephen M.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 (1991).

Kenneth Waltz,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Vol. 6, No. 1 (Autumn 1996), p. 54.

Weathersby, Katheryn.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3, No. 4 (Winter
1994).

Wolfers, Arnold.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62 (December 1952).

Zhang, Shu Guang. *Deterrence and Strategic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3. 기 타

「조선일보」.

「중앙일보」.

「로동신문」.

「중앙방송」.

「중앙통신」.

「평양방송」.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외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혜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현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동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으로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99-16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99-17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박종철	공저	7,000원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저	7,000원
99-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이교덕	공저	5,500원
99-20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용표	저	4,000원
99-2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저	5,000원
99-22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최춘흠	저	4,000원
99-23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최수영·박영호·홍관희·허문영	공저	6,000원
99-2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여인곤·김국신·김영춘	공저	8,000원
99-25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최의철	저	5,000원
2000-01	미·일의 TMD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전성훈	저	8,000원
2000-02	대북포용정책 추진전략: 발전을 통한 변화	황병덕	저	6,500원
2000-03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의철	저	8,000원

2000-04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김병로	저	9,500원
2000-05	페리프로세스와 한·미·일 협력방안	박종철	저	5,000원
2000-06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김학성	저	9,500원
2000-07	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신상진	저	5,000원
2000-08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방안	이교덕	저	5,500원
2000-09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합의	김성철	저	5,000원
2000-10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최진욱	저	5,000원
2000-11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임강택	저	6,500원
2000-12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박영호	저	7,500원
2000-13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손기웅	저	4,000원
2000-14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영규	저	5,000원
2000-15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조민	저	5,500원
2000-16	남북한 학술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500원
2000-17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박형중	저	6,500원
2000-18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김영운	저	6,500원
2000-19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배정호	저	4,000원
2000-20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여인곤	저	5,000원

2000-21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북·일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김영준	저	4,500원
2000-22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0-2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	김규륜	저	5,500원
2000-24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전망	정영태	저	5,000원
2000-25	남북경협 모델 설정	최수영	저	4,500원
2000-26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전현준	저	3,500원
2000-27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이우영	저	5,500원
2000-28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	임순희	저	6,000원
2000-29	미국의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및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김국신	저	3,500원
2000-30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외교·안보 분야 중심으로	최춘흠	저	3,000원
2000-31	대형 남북경협 사업 여건과 추진방향	오승렬	저	5,000원
2000-32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이금순	저	5,000원
2000-33	한반도 평화전략	김학성·허문영·홍용표의	공저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6,500원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6,500원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0</i>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500원
북한인권백서 2001	최의철·서재진·이금순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1</i>	최의철·서재진·이금순의 공저	6,5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99 The Unification Environment and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1999~2000		8,500원
200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0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99-07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V):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9,000원
2000-01	대북포용정책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5,500원
2000-0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4,000원
2000-04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7,000원
2000-05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6,000원
2000-06	남북공동선언과 동북아 평화전망	7,500원
2001-01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5,500원
2001-02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구축	6,500원
2001-03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정세와 한·중협력	5,500원
2001-05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5,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199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 (2000)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8 (199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9, No. 1 (200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0, No. 1 (2001)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500원
--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통일정책포럼			
2000-01	2000년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전현준 저	2,500원
■ 정책연구보고서			
2000-01	2000년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방향	서재진 저	3,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0-01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6,500원
2000-0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방안		10,000원
2000-03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 안보·외교환경 조성방안	여인권의 공저	9,500원
2000-04	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남북 화해·협력 촉진 방안	홍관희의 공저	10,000원
2000-05	대북포용정책과 국내정치 여건 조성 방안	박형중의 공저	10,000원
2000-06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이우영의 공저	7,500원
2000-07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조한범의 공저	8,000원
2000-08	남북한 농업교류·협력방안 연구	최수영의 공저	7,500원
2000-09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한만길·양현모의 공저	10,000원
2000-10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길은배의 공저	9,000원
2000-11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김재인의 공저	10,000원

2000-12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조은석의 공저	10,000원
2000-13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방안 연구	신동완의 공저	10,000원
2000-14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강일규의 공저	10,000원
2001-01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5,500원
<p>■ 기타</p>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

인쇄/2000년 12월 26일

발행/2000년 12월 28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통일연구원장

편집인/북한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통일연구원, 200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479-050-8

3,000원

통일연구원



G0004694